

[4주차 강화도조약과 개항]

3차시 Page 8

조선정부가 일본의 서계, 국서 접수를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전통적인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국서라는 의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서의 서식이 기존과 다르고 대마도주의 직함도 다르다.

→ 여러가지 상당히 중요한 의례 절차가 다르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음

이러한 서계문제가 얽히면서 교섭 자체가 난항에 빠짐.

흥선대원군이 축출되면서 국교 재개에 의한 교섭이 새로운 전개를 맞게 된다.

특히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요원, 우의정이었던 박규수와 같은 인물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분란거리, 특히 통교 자체를 거절하는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권위도 분명히 있었음.

개화파의 대외적인 개방에 관한 인식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

청나라 역시도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서양 열강과의 국교를 우리의 개입 없이 다른 물리적인 이유로 조선이 자체적으로 국교를 맺는 것 자체에는 상당한 저항감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중재 하에 개항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비춰질 만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었다.

일본의 대만 침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일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나라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국교 재개를 고려하게 되었다.

실제로 회담이 성사되어서 회담을 시작한다.

Page 9

1875년 초에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서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조선 정부의 입장.

국서에 쓰인 언어 자체도 한문으로 되었는데, 그게 일본어로 되어 있었음. 이 점 역시 문제

의례적인 절차라는 것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

조선 왕이 쓰시마에 하사했던 도장(도서)을 왜 맘대로 바꾸느냐. 이 문제도 중요

Page 10

운요호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남, 함포 사격연습을 함, 조선에 굉장한 충격을 줌. 상당한 위기의식이 생겨남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조정에서 서계접수를 해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됨

일본의 무력시위가 시작되고 난 후에도 조정의 주류적인 입장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보면 서계접수를 해주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열린 사람이 몇 없음(박규수 등)

서계접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임

서계접수를 해주자고 주장하는 박규수 같은 소수의 견해도, 왜 접수를 해줘야 하느냐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력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접수를 해주자 였다. 무력동원조짐에 대한 위기의식은 상당히 있었다.

일본 정부는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일본이 무력시위를 넘어서서 실제로 상륙해서 무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력시위에 직면해서 접견대관과 부관을 임명해서 일본쪽의 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온 접견대관을 만나게 함.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의 의도를 예상하진 못하고 있었음. 조약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음

당시 신현과 윤자승의 임무는 일본인들을 접견하고 요구사항이 원지를 돌아와서 조정에 보고하는 정도

2차 회담에서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 초안서를 제출함.

당시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시 국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서계접수만이 문제라고 생각했음.

우리는 일본과 300년 가까이 교역을 했는데 왜 새롭게 교역에 관한 조약을 해야 하는가? 이게 왜 필요한가? 에 대한 의문, 의의를 제기함. 조약초안을 조정에 보고한 다음에 조정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함

서계의 형식이 문제가 돼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분쟁, 서계로 촉발됐던 외교분쟁이 8년간 이어졌음. 이 외교 교섭 자체가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하게됨

청나라의 자문 없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일이 그 전에는 없었음. 조선 정부의 이런 결정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음.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은 결국 고종과 의정부 핵심 인물들이었다고 봐야 한다.

이 조약에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해보면, 조선 정부도 조약을 체결하자고 결정한 이후에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음. 그런것들 외에는 조선정부 역시도 이것을 빨리 타결을 짓자 라고 하는 모습이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야에서는(의정부 밖의 사회에서는) 개항에 대한 여러가지 여론들이 등장함.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이런 계획을 상당히 장기간동안 논의해서 가져온걸로 보이는데, 일본의 준비과정과 비교했을 때 조선 정부는 상당히 준비 없이 회담에 임했고, 큰 준비과정 없이 신원한테 정권을 부여했음. 이런 결정은 상당히 전격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약의 내용들을 일일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노정하고 있었다고 평가를 해야 한다.

제 4, 5관 부분

종래의 외교관계에서는, 사대교린이라고 하는데 큰나라는 섬기고 이웃한 나라와 어찌구

교린체제 하에서 조일외교의 실질적인 고관?은 외관이었음. 부산에 있는

외관의 관리와 올 수 있는 배의 규모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었음. 조선이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었음

반면 공관은 치외법권이라는 것을 가진 외교사절의 거주지역임. 거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임

외관 같은 경우는 조선관리가 거주지역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관문도 설치하고, 통행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규제를 따른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외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해주고 허가받은 상인들만이 교역할 수 있는 영역이었음

그런데 4, 5관 개항장의 선정과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외무성 관리?가 처음 조선에 파견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될 수 밖에 없음. 4관에 근거해서 조선땅에서 외관보다 훨씬 확장된 공간에 조계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전면적으로 개항정책을 취하게 된 것임. 세계 무대에 조선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맞음. 첫번째 근대적인 국제조약이었음. 하지만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적인 침략의 시발점이었다.

조약 체결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성급하고 신속하게 결정되었음. 조선사회 내부에서 척사파 개화파 사이의 대립이 상당히 강화되는 정책적 전환점이기도 했음

일본과 한번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이런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명분도 사라짐

[5주차 개항기 조선, 서양과 만나다]

1차시 Page 2

정동이라는 장소가 중요하게 떠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19세기 중반에 서양 열강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표방했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다른 열강의 정치적 경계심을 서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다. 동아시아 각국들을 두고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이렇게 나쁜쪽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음.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선을 지키려고 한다. 한 지역을 식민지화 할 땐 상당히 조심스럽다. 먼저 식민지화 하려는 움직임이 많진 않음

열강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어딘가를 식민지를 삼고자 할때는 상당히 서로 눈치를 보고 기나긴 과정을 거친다. 직접 통치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

동아시아 진출을 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 **통상, 영향력**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전적으로 다 다스리는 식민지보다는 반식민지화를 꾀하는 경우가 많았음.

고전적인 식민지는 영토를 획득하는 것. 그 영토를 획득해서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따른다. 거기도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영토를 획득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실리가 없다.

영토 획득보다는 실리를 찾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Ex 남경조약

관세, 협정관세를 통해서 저율의, 낮은 관세를 따른다던지 자유무역 같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치외법권(상대방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해군기지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것. 이런것들을 중심으로 비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를 구현해감. 이런 것들의 시작이 남경조약임. 개항장 체제라고도 할 수 있음. 영국과 중국 사이에 남경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려는 형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은 서양 열강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 1876년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조약 체결의 문은 열렸음. 그런데 남경조약처럼 다른 나라들이 와서 자기들과도 조약을 체결하자는 움직임은 빠른 시간안에 나타나지는 않았음.

그 시점에서는 이미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양 열강들 사이에 많이 있었음. 서양 열강의 시선으로 봤을 때 조선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이득은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

중국과 조선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중국의 시장이 더 넓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본이 주도해서 부산과 원산이 개항장으로 지정된다. 거주통상을 거류지 설정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열강들이 바로 뛰어들진 않았음.

그러다가 1882년이 되면 서양 열강과 조약 체결을 차례대로 진행함.

이 배경에는 일본이 조선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서양 열강 5개국은 이미 중국과는 통상조약의 관계를 체결했던 국가들임. 그렇다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중국, 당시 청나라 정

부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이제이 라는 계산이 깔려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이었지만 1883년에 체결된 조영통상조약이 하나의 선례처럼 여겨졌다. 가장 먼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던 미국과는 다르게 영국은 협상은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조약을 조인하기까지 1년반정도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 통상조건에 대한 조율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기존의 개항장 중심의 항구들만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았음. 영국은 실리가 뭔지를 잘 알았음. 조선 내륙의 시장을 여는 것을 통상조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율과정을 상당히 오래 가졌음. 내륙 시장의 가장 주요대상은 당연히 수도인 서울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한국뿐만이 아닌 그 중심지를 겨냥하고 싶었음. 항구만을 중심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말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그래서 영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조약을 신경쓰지 않고 청나라와 조선간의, 청국과 통상에 관한 규정을 조선이 새로 체결을 한다. 이게 체결되기를 영국은 기다렸다. 왜냐면 다른 서양 열강들과의 조약과 다르게 조선과 청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양화진을 통해서 한성, 서울의 시장을 관련된 규정이 반드시 여기에는 포함이 될 것이다. 조선과 청 사이의 조약에는. 이것을 예상했었기 때문.

그래서 영국 이후에 조약을 체결했던 다른 서양 열강들은,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이 조청상미무역장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고, 서울시장을 여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통상조약에 뛰어들어서 조인을 하기 시작함.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서울을 왕래하고, 때때로 주거하기도 하고, 이런 통상과 거주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조선은 개항 이전에는 서양 국가들과는 일절 공식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잘못 안착해서 표류해서 오거나 천주교 포교를 위해 중국을 통해 밀입국하는 경우 아니면 서양인이 조선 내륙에 와서 활동하는 일이 X

Page 3

한국에 조계가 처음 설정된 곳은 어디? 제물포는 아님.

가장 처음에 조계가 설정된 곳은 1877년에 부산과 관련된 조계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임.

서양국가와 접점이 생기는 조계로는 인천이 처음. 개항장으로는

조계라고 하는 곳에는 전관조계와 공동조계로 나뉘볼 수 있음.

전관조계는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맺어진 거주지역임. 한 개 국가의 사람들만이 거주하고 상행위(물건 사고파는 행위)를 함

공동조계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공동으로 와서 거주하고 상행위를 하는 곳을 말함.

전관조계든 공동조계든 일정하게 국권을 침해함. 치외법권을 설정하기 때문.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목적

일본이 한국과 가장 처음 수호통상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설정을 한 것은 공동조계에 해당함. 그렇기 때문에 부산, 인천은 모두 공동조계에 해당함.

일본이 개항장에 조계를 설정할 때 이 역시도 의도를 보면 경제적 침략, 정치적으로도 이후에 식민지화를 위한 것들이었다고 봐야함.

제물포도 강화도 조약 당시 개항장으로 지정이 되었던 곳, 앞으로 개항할 항구로 지정된 곳 중 하나.

개항이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제물포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은 거의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음. 일본하고만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

제물포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인 개항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인천을 중심으로 생겨났던 대표적인 근대 시설인 호텔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됨. 최초의 호텔은 인천에 생김

도봉소사건 이라고 이야기 하는 일들이 1882 년 6 월에 발생한다.

도봉서는 사내청이라고 해서 쌀, 곡식을 보관하는 사내청의 창고이다. 이 도봉소에서 군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일이 있었다. 어느 군인에게 지급을 하느냐

당시 경과를 간단히 보면,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창설되었음. 신식 군대이기 때문에 대우도 좋았고 급료도 높았음.

그런데 그것과 달리 구식군대와 같은 경우는 5 명 중 무영에 소속이 됐던 훈련도감에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급료가 13 개월씩 밀려 있었음.

세곡(세금을 쌀로 걷음)이 서울에 도착해서 정부가 밀린 급료를 지급해줘야 하는데, 밀린 것을 다 지급하는게 아니라 한달치를 주겠다고 해서 급료를 못받았던 군인들이 도봉소에 갔다.

지급받은 쌀을 보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벼와 모래가 섞여있었고 양도 굉장히 적었다. 군병들은 이런 급료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함. 이걸 지급하는 말단 관리들이 지급을 하려고 관건. 말다툼이 벌어짐, 이것이 격화되면서 말단 관리들을 군인들이 구타하고 돌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남.

사내청의 최고 책임자가 민경호라는 인물, 민경호에게 보고됨. 분란 사건을 주동했던 4 명의 분란자를 포도청에 가둠.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하는데, 거절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주동자를 잡아들여서 포도청에 가뒀다고 함, 소문이 굉장히 안좋아짐. 군령들이 모여서 결집하게 됨

정부는 여기에 관한 인식이 안일했음. 운동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 모여드는 군병들을 회유해서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군인들 사이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았음. 오히려 정부에서 회유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이 살해되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짐.

훈련도감 소속의 군병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비를 담당하는 주력부대였다. 군인들이 저항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서울을 지키는 군인들이었는데 당시 정부로써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만한 병력이 당장은 없었음. 사태를 관망하게 됨.

당시 군인들과 저항운동에 결집을 한 하층민들, 이들의 주요 타겟이 어디냐 라고 하면 우리 생활을 힘들게 한, 급료도 밀리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당시 최대 권력자를 명성황후라고 생각했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층민의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한 곡물이 쌀 부족하니까 급료가 밀리게 됨, 당시 곡물의 부족현상을 야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개항 이후에 일본이 쌀을 엄청나게 사서 본국에서 팜, 당시 일본 내부의 식량 수급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결함.

곡물 유출을 하는 일본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좋지 않았음.

주 타겟은 명성황후와 주변의 권력자들, 일본이었음

운동 세력이 습격을 하게 됨. 주변의 친척들이나 권력자들을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친척도 살해됨.

궁궐 문앞으로 가서 대궐로 들어감. 그러면서 민경호도 찾아내서 살해함. 명성황후는 변장하고 도망가서 죽진않음

일본 공사관도 습격함.

저항운동이 서울시내와 왕궁을 휩쓸고, 기존 정치 집단은, 정부는 이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니 고종은 결국 흥선대원군에게 일처리를 맡김. 대원군은 사실상 정권을 다시 장악하게 됨

운동에 참가하고 있던 군병과 하층민들을 무마해야 하니, 이 운동은 정당하다 라고 하는 교지(왕의 뜻이 담긴)를 반포해서 불법한게 아니야 라고 하고 별기군을 폐지함.

별기군을 신설하게 되면서 기존에 5 명으로 있었던 군인들을 2 명으로 줄임, 사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는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음. 2 명을 다시 5 명으로 복귀

이건 근본적으로 당시 명성황후의 친인척들, 고종과 함께 뜻을 맞췄던 친인척들이 추진했던 나름의 개화정책을 백지화 시킨것과 마찬가지로였음.

군사적으로 난리가 나니까 이것을 계기로 일본과 청에서는 우리가 진압해 주겠다면서 군대를 파견함.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유로 삼아서 조선 내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다보니 청나라와 일본과의 각축이 벌어날 수밖에 없었음.

사실 조선 정부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났으니 진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나라에게 함. 반란이 끝난 이후에도 청나라는 군대를 빼지 않음. 그러면서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장악한 것이 자신들의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의 내부에 개입하는데 흥선대원군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청국 군함으로 초대함. 그대로 납치함

청나라는 이렇게 임오군란에 개입함으로써 나름대로 수확을 거둠. 그 수확이 조청상미수륙무역장정에서 나타남

이 조청상미수륙무역장정 체결은 임오군란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있던 상황. 조선정부가 일본과도 새로 조약을 체결했고 청나라와도 국제관계 추세에 따라 새로운 통상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음.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때는 일본이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기존의 조청관계에서는, 이것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고 보니, 이것이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었음.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도 제대로 부가할 수 없게 됐고, 일본 상인이 조선 내에서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음. 조선 정부도 이 독점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었음. 조선과 청 모두.

임오군란이 진압함에 있어서 청나라가 조선정부 요청에 따라 와서 도와줬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난 후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하니, 청나라의 입장이 조금 더 강이 되었음. 청나라의 요구를 조선 정부가 조금 더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대원군이 납치한 행동 자체는 조선의 자주성,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야 라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한 무단적인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

조청상미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종주권 같은 것을 명문화한 것임. 청나라가 정치적으로 얻은 것은 상당히 많음.

갑신정변은 임오군란과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

당시 조선의 정치권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척족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위정척사파와는 다름. 자신들이 주도하는 개화정책을 펼치고자 했으니까. 청과의 관계 속에서

또다른 정치세력이라고 한다면 개화에는 동의하지만, 청나라에 예속된 상태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젊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가 있었다.

둘 다 개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동의하지만, 방법은 상당히 달랐음. 일명 수구파라고 부를 수 있는, 명성황후 중심의 척족세력들이 젊은 인사들로 구성된 개화파를 상당히 탄압했음.

이 개화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조산에 대한 속방화 정책과 같은 것들을 단호하게 쳐내야 한다. 방법으로는 정변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수단을 활용했음.

임오군란 이후에 조선 정치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노골화되고 직접적이었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주권을 굉장히 침해한다고 생각했고,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외국, 특히 영미권 구미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음.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먼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청나라의 주선이 있었음. 당시 청나라는 일본을 어느정도 견제하기 위해 이이제가 정책을 펼쳤음. 그 시작이 미국. 이 상황에서 개화파는 미국의 힘에 기대보자, 청나라의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온 외교관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포크랑 후크?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미국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와있는 사람들임. 미국은 다른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아시아 진출이 늦었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나라가 다른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기보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상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함. 그래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음. 그런데 미국정부 자체가 조선에 대한 흥미가 퇴색되어가고 있었음. 미국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각각 독립을 유지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 사이에서 다른 나라들과 이해관계라는게 생겼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는게 미국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 되었음.

그렇기 때문에 개화파 요인들이 영국,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음. 영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우선

Page 6

구미열강과의 국교수립이 개화파 사람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다보니, 승부수를 던져야 겠다고 판단함. 이 시점이 바로 베트남 쪽에서 베트남 전선을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충돌하는 시기가 있었음.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 문제에 특히 군사적으로 심하게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국제관계에서 도래함.

이때 이 상황을 이용해서 개화파를 추동하는 세력이 있었음. 그게 바로 일본이었음. 일본 입장에서는 임오군란때 한번 당하기도 했고, 청나라가 밀고 들어오면서 조선 내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였음. 청나라가 조선에 100% 신경을 쓰지 못하는 청불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으니 그 전까지는 개화파 요인들에게 냉랭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면 군사적으로 도와주겠다함

개화파는 우정국 낙성식, 낙성식에 축하파티가 일어나는 날 정변을 일으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정변을 성공해서 궁궐로 들어감. 궁궐로 들어가서 왕을 포위한 다음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처단함.

정변을 일으켜서 신정부를 수립하게 됐는데, 청나라 정부가 조선에서 군사를 다 뺐 것은 아니었음. 줄였을 뿐

때마침 청불전쟁이 급격하게 해결됨. 청나라 군사들이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됨. 청나라 군사들이 언제 정변을 진압하러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이 변하니 일본이 발을 빼버림. 청나라 군사가 들어왔을 때 수비할 수 있는 군력이 거의 없는 상태

3 일이 지난 시점에 청나라 군사가 창덕궁으로 공격해서 들어옴. 3 일천하로 갑신정변은 끝나게 됨.

3 차시 Page 7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은 통미교섭통상상호아문이었음. 조선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 만든 부처 중 하나.

해관은 처음으로 도입된, 설치된 근대적인 행정사무기관. 박동에 해관 본부를 창설함.

당시 박동은 경복궁과 창덕궁, 두개 궁궐의 중간정도에 위치함. 도성의 중심지였음. 박동 바로 옆이 제동이었는데, 이 제동에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개화정책의 주요 부처인 통미교섭통상상호아문이 있었음.

근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지가 박동을 중심으로 한 곳이었음.

뮌헨도르프로부터 시작해서 근대 사물을 전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서양인들의 거주지도 여기를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음.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박동 인근 지대가 위험지대로 고스란히 노출이 됨. 여기가 방어랑 탈출을 하기에 취약한 지역임을 깨달음

새로운 곳을 찾은게 바로 정동

Page 8

정동은 언덕이었고, 궁궐 벽과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었음. 박동보다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줌

지리적으로도 한강에서 남쪽이다보니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타고 한강에서 내려서 들어오기가 훨씬 더 가까움. 출입이 용이함

이런 인접성들이 장점이었음

Page 9

서울 정동이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가?

미국과 영국의 공사관 부지가 정동에 마련되고, 외교관들이 입국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국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음. 공사관 주변을 감싸면서 선교 거점을 마련함. 조선 정부도 선교사들의 서울 진출을 허가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음. 병원과 학교에 한해서 사업을 허락함. 교회는 안됨

이 부지가 외국인들이 사는 곳과 가깝고, 한국인들이 사는 곳과도 접근성이 좋다. 부지가 높아서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고, 배수도 잘 된다. 위생적으로도 괜찮음. 주변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고 편지에 씀.

Page 10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러시아 공사관이 들어옴. 정동에서도 가장 높은 부지를 선택함.

해관은 조선의 문물, 제도에 있어서 근대화의 속도를 돈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행정기관이었음. 개항 이후 조선의 제정, 경제의 근대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관이었는데, 이마저도 정동으로 이전해버리니까 이때부터 정동은 외교, 선교뿐만 아니라 통상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구미열강, 서양열강이 추구하는 근대화의 전진기지와의도 같은 상징성을 가진 장소가 됨. 열강들 사이에서 외교정보를 수집하고, 조선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정보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들어와야하는 지역이 됨. 1890 년으로 접어들면서.

정동의 풍경이 외교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1890 년 무렵에는 굉장히 명확해짐

본격적으로 외국 공사관 건물,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주변환경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이때부터 같이 시작됨. 서울의 근대 도시화 사업과 맞물려서 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 바꾸기 같은 것들이 시작됨

Page 11

처음 도로정비(1894)는 그냥 도로를 정비하는 정도였음. 그런데 1895 년이 되면 정부가 예산을 측정해서 조사측량,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정부의 사업 형식으로 변화됨.

이 사업이 정동의 공사관 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남대문로쪽이 첫 대상이 됨. 정동으로 시작이 되니 정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위원회에 참여해서 시작됨.

이 도로정비사업은 서양인들 시각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임.

Page 12

1895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남.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함.

대한제국 선포 후 경운궁, 덕수궁의 황실이 확장됨. 서양인들이 기존에 매입해서 선점했었던 지역을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확장함.

Page 13

[6 주차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1 차시 Page 2

청과 일본, 조선사이의 관계가 개항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외교), 동아시아를 둘러싼 서양 열강의 이해관계

"1880 년대에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서양 열강이라 부르는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영국은 청과 남경조약, 텐진조약을 맺은 후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영국은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러시아는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역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음. 19 세기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조선을 방파제로 활용해볼수 없을까 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영국이 직접 러시아와 조선을 방파제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보다는 청나라와 영국의 관계가 특수하니 조선에서 청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걸 영국이 밀어주자. 그럼으로써 러시아의 남야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했다. 무역을 하려면 항구를 4 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게 좋다.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얼지 않는 항구(부동항)를 얻고싶어함. 그렇기 때문에 국경에 가까운 조선과 앞으로 딜을 하는데 있어서 러시아와 당시 적대적인 관계였던 영국 혹은 일본의 통제 아래 조선이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골치아파질 수 있는걸 고려함.

미국은 처음에는 한반도의 세력 균형정도면 땡큐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개항 이후에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일본을 협조해주는 편이 앞으로 미국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음. 서서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됨

일본은 조선을 앞으로 팽창해나갈 수 있는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그런 교두보로 굳히기를 하고 싶은 생각

청나라에게 조선은 소중한 존재였음. 19 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에서 청나라의 지위가 흔들림. 영국에게 전쟁도 짐. 그런 상태에서 조선까지 잃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됨. 청나라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음. 러시아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부터 견제해야겠다고 판단했음. 처음에는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일본, 영국, 청나라 모두 싫어했음.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 삼국간의 관계를 보자면,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청나라와 일본사이도 상당히 긴장관계로 빠질수밖에 없었음. 특히 청나라와 일본 사이 유명한 관계는 류큐, 대만 두 지역을 두고 각종 긴장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됨.

일본이 1868 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됨. 1870 년에 일본이 청나라에 특사를 파견함. 청은 조선에 한 요청과 비슷한 요청을 함.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처럼 비슷한 조약을 맺자고 제안함. 청나라는 일본의 요구를 받고 새삼스럽게 너희랑 우리가 왜? 라는 반응을 보임. 서양과의 남경조약 이후에 텐진조약 같은 것들은 외교적 상황, 열강에 굴복해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 그것에 비해 일본은 그저 주변국이라고 생각했음. 우리가 왜 주변국한테 서양한테 해준 것처럼 해줘야 하지?

이렇게 거절을 당하다 보니 일본 특사 사절이 당시 중국의 실권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함. 너희가 우리 요청을 끝까지 수락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도 영국이랑 프랑스랑 친해. 너희한테 영국과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압력을 행사할수도 있어 라고 암시

이홍장(청)이 그런 암시에 바로 굴복한 것은 아님. 생각해보니 동아시아의 국가의 일원은 일본과 협조의 관계를 맺어놓는 것이 청나라에게 나쁠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 청나라도 서양 열강의 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끝에 일본과 조약을 체결함. 이 조약은 협상 과정에서 차별점이 있음. 일본이 요구했던 것은 청나라가 서양 각국과 맺었던 수호통상조약 형태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게 목표였음. 청나라는 당연히 거절함.

그런데 당시 상황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조약의 체결을 먼저 요청하고 원했던 쪽은 일본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는 일본이 아주 우위의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아니었음. 그래서 양국이 맺은 조약의 내용을 보면, 청과 일본간의

조약에는 최혜국대우 조약이 없음.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 내지 안까지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운항권과 같은 특권들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음. 그리고 조약에 있는 모든 규정은 서로가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쌍무원칙도 들어가지 않음.

청일수호조규나 통상장정의 내용을 보면, 이때 조약은 청나라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어서 체결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음.

청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류큐와 일본간의 관계가 맺어진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적이 없음. 류큐, 대만은 명나라부터 중국의 번속국이었을 뿐임. 대만과 류큐는 원래부터 청나라의 영토였다고 생각했음. 따라서 타이완의 원주민과 류큐의 원주민이 서로 싸운 사건은 우리 정부에서 알아서 판결할거라고 단언함.

일본은 이런 청나라의 입장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음. 일본은 대만을 침공함. 한편으로는 류큐에 대한 작업들도 가속화해서 류큐 국왕한테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명령함. 군사도 류큐에 파견해서 주둔시킴. 식민지화 진행함. 직접통치를 하게 됨. 이름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킴.

청나라는 류큐와 대만은 우리꺼라고 했는데 우리 말은 들은척도 안하고 류큐를 차차 병탄을 해온 점을 그대로 눈뜨고 보고 있었음. 일본이 하려고 하는게 동아시아에서 종주국으로서의 권위,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주권을 아예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인식.

청나라는 일을 크게 벌여서 류큐를 두고 일본과 싸울 생각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주권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일본의 행동들은 큰 경종을 울리는 것일 수밖에 없었음. 청나라에게 류큐는 황당하긴 하지만 다른 열강들 눈치를 봐서라도 멈출 수 있었음. 하지만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상당히 다른 문제였음. 조선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였음. 언젠가 일본이 조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날이 올 것이라 느낌. 그렇게 되기 전에 조선에서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게됨. 청나라의 동아시아에서의 화의질서를 이루는 구성원 가운데 조선이 가장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 조선까지 빼앗겨버리면 동아시아에서 청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게 됨.

지금까지 조선은 우리의 속방이니까 모든 외교관계를 맺을 때 항상 청나라를 통해 맺어야 하고, 오로지 가급적이면 청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는 자의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청의 입장이었음.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조선이 여러 열강들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일본, 우리에게 지금 제일 위험한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음.

그래서 청나라가 미국과의 조약 체결도 중재해줌. 그와 동시에 청나라 자체적으로도 조선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시작하게 됨.

일본은 일본대로 자신들의 계획을 시작하려고 함. 경제적인 침략을 가속화하고 틈만나면 조선 내부에서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함. 그런 작업을 한 결과로 일어난 것이 갑신정변.

조선 정부 내부의 갈등을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용함. 일본의 정치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

청나라가 임오군란 진압을 도와주고 지원군 군사들이 임오군란 사태를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정권을 잡았던 대원군을 납치해서 청으로 압송시킴.

임오군란 자체가 청나라가 조선에 더더욱 내정간섭을 심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임. 이 사태가 확장되는걸 막아야 일본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는걸 알았기 때문임.

일본은 우리 공사관이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서 병력을 조선에 파견함. 너네가 내정을 잘못해서 공사관에 불나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본 외교관이나 일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병력을 주둔시킬 것임. 그 권한을 달라고 압력을 가함. 그렇게 해서 체결된 것이 제물포 조약임. 임오군란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때 함. 손해배상 금액 중 얼마를 면제해줄 테니 대신 청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도 했었음.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갈등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대만과 오키나와 때문에 촉발될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조선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일본이 당시(갑신정변) 노렸던 목표는, 군사적으로 청나라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시키는 것.

결국 양국이 합의를 하게 됨. 조선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나라와 일본 모두 서로 알리고 동의를 해야만 군사를 조선에 파병하는게 가능하다고 합의.

그 이후 10 년간은 조선 내에서 청나라의 위세와 세력이 훨씬 더 강했음.

청나라의 이해관계는 일본과 러시아 양쪽을 다 견제하고 싶어했음. 자신들이 중재를 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자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과 외교사절을 교환하거나 이런 일도 사사건건 방해함.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통제를 강화함.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10 년간 조선 내에서 세력에 대해 청나라에게 상당히 밀림.

왜 당시 10 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일본이 청나라를 대놓고 더 심하게 견제하거나 맞서지 않았는가?

1. 러시아도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청나라에 맞서기 보다는 공동의 적인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서는 청나라의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청나라를 크게 견제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음.
2. 내심 청나라가 조선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고 일본을 떠밀려고 하고는 있지만, 막상 전쟁을 치르게 되면 청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까, 중국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판단하고 있지 않았음. 그렇기 때문에 10 년간은 청나라가 세력을 확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차시 Page 3

청일전쟁이 발생한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왜 발생했는가?

개항 이후 조선의 농민층, 소상공 층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몰락함. 그런데 조선이 불평등 조약 체재 내에서 개항을 한 상태였음. 일본은 조선보다는 자본주의적인 경제시장은 조금 더 발전한 상태였음.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 자신들이 미국이나 서양 열강과 불평등 조약에서 입게 된 경제적인 손해를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 만회하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음.

일본이 조선에서 쌀을 많이 수입해감. 조선 내에서 쌀은 주식이기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도구이기도 했음. 그런데 쌀 유출이 많아지면 쌀값이 올라감. 개항한 이후 근 10 년 사이 쌀값이 7배가 오름. 1890 년에 겹어들 때 일본의 국내 사정들(물가가 오름)이 겹쳐서 쌀을 조선에서 더 많이 사들임. 쌀값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국내의 쌀값도 올라가고 세금도 쌀로 내야함. 한국의 농민층들은 답이 없음. 그러다보니 이걸 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방곡령을 내림. 쌀을 유출하는 것을 지방관이 통제하는 것임(방곡령)

중앙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못했음. 일본의 경제적인 침탈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내국인들이 온몸으로 떠안게 됐음.

공업면제품이 훨씬 더 싼 값에 대량으로 들어옴. 이런 제품들의 유입이 국내 시장이 하나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오다 보니 굉장한 경제적 타격을 줌. 소상공이나 옷감을 취급하는 상인들에게. 모두 몰락함. 상인들 역시도 청나라나 일본 상인들이 내륙 시장으로 밀고 들어오니 시장에서 시위하는 등 집단행동을 함. 그만큼 농민층, 상인층이 어려웠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감.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극심하니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관아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남. 1 차 봉기로 번지게 됨. 당시 1 차 봉기에서 농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들어다보면, 탐관오리를 제거하라, 소상공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경제활동의 안정성. 이런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보국안민(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제폭구민(폭군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라)

1 차 봉기가 일어나니까 조선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농민봉기가 크게 일어나니까 청나라에게 지원군을 요청함. 청나라가 병력을 파견하니까 일본에 알려야 함(약속함) 일본도 그 소식을 듣고 파병함. 이러는 와중에 정부가 농민층과 화약을 맺음. 전주화약. 이 화약에서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청나라와 일본군은 철수하라. 그리고 몇가지 개혁 조건으로 폐정개혁안을 요구. 경제나 탐관오리에 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폐정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함. 그러면서 농민군이 점령했던 지역들에다가는 집강소를 설치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개혁조치들을 취함. 정부 역시도 이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교정청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호응을 함.

그런데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한번 들여온 군사를 빼는 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 일본군이 철수하는걸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함. 우리가 너네 내정개혁 해줄거야 라고 하면서 교정청도 폐지시킴. 일본군이 경복궁이 점령하게 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임. 어떻게 보면.

일본군은 청나라가 철수하자는 제안을 하니, 내정개혁을 같이 하자고 청나라에게 요구함. 청나라는 거절함. 그 시점까지는 조선 내에서 청나라의 세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 거기에 일본을 꺼줄 이유가 없었음. 일본이 무단으로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발발

이 과정을 보고 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함. 2차 봉기에서는 척왜, 일본에 대한 반일 척왜의 명분이 굉장히 뚜렷했고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음. 일본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됨.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는 과정과 맞물려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됨.

Page 4

정부와 동학농민군측과 화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더 이상 있을 구실이 사라짐. 청나라도 마찬가지.

공동철수를 하려고 청나라와 일본쪽이 만남. 일본은 공동개혁안을 청 측에 내놔지만 거절당함. 그러면서 일본이 단독으로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남.

청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쪽에 얘기함. 러시아와 미국도 일본군에게 조선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함.

일본은 당시 영국과 영일신조약을 체결함. 간접적으로 절대 영국이 앞으로 나서지 않고 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음. 그런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을 단독으로 불법 점령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자기들 말을 들어줄 만한 내각을 수립함. 친일정권을 수립. 거기 등장한 인물이 흥선대원군, 김홍집.

일본은 아예 전쟁준비를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조선 군대부터 무장해제시킴. 당시 청나라 군대가 있는 곳(천안)을 향해 감. 당시 일본군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기면서 북상하게 됨(중국으로 감). 청나라가 빠른 시간 안에 불리해짐. 청나라도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어짐. 강화회담이 시작됨.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에서 회담을 시작할 때는 일본도 약간 쫓기게 됨. 동아시아에서의 상황은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당히 주시함.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일본도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갈 명분의 부족이라던지, 열강들이 다른 행보를 보였을 때 러시아나 프랑스, 독일이 간섭을 하게 되면 일본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쟁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그러다 보니 서둘러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마무리해서 체결함.

Page 5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 조선과 청의 전통적인 타의, 조선과 뭘 하려면 항상 청나라를 거쳐야 한다는 타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조항. 조선 역시 청에게 바쳐왔던 전통적인 조공이나 예법, 전례를 완전히 폐지하게 한다고 요구

이 네가지 조항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훨씬 더 우월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됨. 청을 밀어내고. 전통적으로 조선에 대해 행사했던 청나라의 종주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정치, 군사, 경제적 우위를 장악하게됨.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6일 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나섬. 두번째 조약의 요동반도에 발작함. 특히 러시아. 북쪽의 러시아와 맞닿은 지역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모두 일본에게 요동반도는 중국에게 반환하라고 요구 → 삼국간섭

독일은 왜? 러시아가 유럽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당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독일이 큰일남.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있다면 그건 아시아 쪽으로 가야함.

당시 일본은 삼국에 맞설 수 있는 정도는 결코 아니었음. 요동반도는 포기함. 대신 청나라에 받는 배상금을 올려받음. 우리가 조선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청나라는 제척. 다음 적은 러시아다. 언젠가 조선을 두고 경쟁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조선에서 확고한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될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만큼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게 됨.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조선정부도 알게되었기 때문. 그래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함.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함. 조선 내에서 개혁조치들도 조선 정부가 듣지 않음. 열반아서 저지른 일이 을미사변.

우리에게 판지를 걸고 우리를 견제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는 명성황후라고 생각. 경복궁에 난입해서 왕비를 살인함. 이 사건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극도로 악화됨. 서양 열강들도 을미사변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난함. 일본정부 자체가 수세에 몰리게 됨.

하필 이 시점에(갑오개혁이 한참 시행되던 시점에) 정부(친일내각)가 일본이 푸쉬해서 시행했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발령이었음. 의병운동이 일어남. 유생들이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파급력이 크진 않았음. 하지만 반일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림(아관파천). 일본의 조선 내에서 정치 세력이 붕괴됨. 조선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당히 후퇴함.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2 차시 정리)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지만, 결론적으로 일본이 얻어간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조선 내에서 일본의 세력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얻은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님. 일단은 동아시아 내에서의 국제 질서에서는, 청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동아시아 삼국간에서는 일본이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등장함(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질서에서는). 또한 일본도 나름대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었음. 그랬을 때 배상금을 많이 받아왔음. 이 배상금이 일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됨. 군수사업이나 공업을 일으키는 데 쓸쓸하게 쓰임. 일본의 근대적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상당한 동력이 청일전쟁의 승리에서 나왔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질서 중심으로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 증표가 바로 식민지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절대 아니었다. 삼국간섭을 받아서 요동반도를 얻는건 실패했지만, 대만은 얻음. 류큐도 어영부영 일본 것이 됨. 아시아 국가로서 식민지를 거느리는 제국주의 국가, 아시아 내에서의 앞서가는 선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됨. 그래서 일본이 조선 내에서의 정치 세력화를 하는 데에는 큰 수확을 얻지 못하고 수세에 몰렸을지 몰라도 동아시아권 내에서의 세력 확장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세력확장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함. 무엇보다도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박탈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큰 성과를 얻음.

3 차시 Page 6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그것에 의해 2 차 동학농민봉기가 있고, 청일전쟁 발발하고, 삼국간섭 일어나고, 을미사변. 이런 여러가지의 사건을 넘기면서 갑오개혁은 진행되고 있었음.

세 기간의 개혁의 성격이 조금씩 다름

1 차 개혁기간에는 개혁을 주관하는 부처가 군국기무처였음.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해서 친일내각을 전면에 세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 청나라와 전쟁을 하느라고 조선 정부와 뭘 할 수가 없었음. 조선 영토 내에서 전쟁을 하려면 일본군도 조선정부의 어느정도의 협조를 받아야 함. 일본이 빠르게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유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과 같다. 열강의 간섭이 일어날 것을 염려. 그래서 이 시기에 군국기무처에서 일어나는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못함. 이 개혁을 주도한 것은 김홍집, 유길준.

김홍집, 유길준은 어느정도 친일내각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친일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 이른바 개화파, 반청) 1 차 개혁때는 반청 개혁사상이 들어가 있는 개혁안들도 있었음.

일본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의안도 있었음. 일본에 대해 종속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개혁안. 상당히 복합적인 기견이면서도 개혁이 활발하게 실시될 수 있었던 기간임(1 차 개혁기간)

군국기무처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관료들은 자주평등의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 청국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종번관계, 속방관계는 단호히 끊어내야 하는 것 강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정도 친일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받을 지점은 있었겠지만 갑오개혁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개혁안들 중 상당부분이 1 차 개혁기간에 나왔음.

2 차 개혁기간엔 전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었음. 이때는 일본 공사가 조금 개입함. 김홍집은 그대로 두고 갑신정변때 퇴출됐던 박영호를 불러옴. 열림내각을 구성시킴. 1 차 기간과 다른 점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상당히 승기를 잡은 때였음. 그랬기 때문에 일본 공사가 서울에 직접 와서 개혁에 상당히 깊이 개입을 함. 갑신정변 당시의 개화파들을 내각에 입각시킴.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선 정부를 일본에 종속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많이 함. 일본인 고문관을 내각에 등용시켜서 배치하고, 일본의 차관을 활용해서 개혁정책을 펼치도록(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부가 묶이도록).

3 차 개혁기간에는 김홍집, 유길준이 다시 집권함. 3 차 기간에는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도 체결했지만, 삼국간섭과 고종의 친러 행보로 일본이 조선 정계에서 수세로 몰린 상태였음. 친미, 친러 성향이 강한 사람들(정동파)이 잠깐 빛을 봄. 3 차 개혁기간 초반에. 이 사람들이 득세를 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일본이 95년 10월에 왕비를 시해함(을비사변)

내각이 더 이상 정동파들이 주도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상당히 친일적인 성격의 개혁들이 실시됨. 대표적으로 단발령. 무리하게 조선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들을 공포 강행을 함으로써 유생층이나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상실하게 됨. 이 상황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함으로써 갑오개혁은 중단됨.

왕이 없으면 개혁이 중단됨. 지금까지의 개혁조치들이 왕을 상당히 배제한 상태에서 내각에 집권한 사람들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때의 조선의 정치제도는 여전히 국왕이 정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이 자리를 떠버리면 개혁을 최종 승인해줄 사람이 없어져버림.

Page 7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은 1880년대(조선이 막 개항을 하고 서구 국가들과 조약을 맺을 때) 외교사절 내지 문화사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젊은 관료들이 해외에 파견함. 그런 사절단의 일원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유학을 가서 외국을 자주 왕래한 사람들이었음.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개화 추진 부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선 내에서 봤을때 그 사람들이 국제 정서라든지 근대 문물에 대한 이해가 밝고, 실무 능력도 갖춘 인물들이었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계도 있었음. 이 개화파 관료들이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점거하고, 그 상태에서 조선에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혁하라고 하면서 갑오개혁이 시작됨. 이때 집권을 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이 개화파 관료들은 일본의 군사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집권했다는 한계는 있음.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개혁을 추진한 부분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갑오개혁 자체가 가진 한계도 역시 있음. 어느정도 타율적인 성격이 있음, 일본과에 관계가 오는 한계가 있음.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는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로 개혁에 임했음. 동학농민봉기라고 하는 국내적인 위기상황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았음.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전쟁에 의해서 국도가 유린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평가받아야 할 사항임.

그랬을 때 일본에 의존을 한 부분, 차관 공여를 받고, 일본 고문관의 파견을 수용하는 2 차 개혁 기간의 일들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고 정치적인 한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지만,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측면들 중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었음.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국내적인 위기상황의 표출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음.

1 차 봉기 당시, 전주화약을 맺을 때 동학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을 제시했음, 이걸 1 차 개혁기간 당시 많이 참고함. 그런 민중적 개혁 요구를 상당히 수렴하려고 노력함. 교정청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폐지되었지만, 이게 갑오개혁의 1 차 개혁기간의 개혁안에 상당히 반영됨(신분제 폐지, 교육제도 등)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조선의 통치제도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개혁의 시도들이 갑오개혁 도중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첫째로 본다면, 일본이 원했던 것이긴 했지만 대외정치 측면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는 분명히 취해짐. 청나라에게 받쳐야 했던 특권들을 법적으로 아예 폐지함. 전통적인 부분에서 지속되고 있었던 연호의 사용, 국왕에 대한 칭호도 다 바꿈. 중국것을 쓰지 않음. 청나라 사신이 와서 머물던 것도 헐어버림.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사업의 일정한 선구적 역할을 갑오개혁의 개혁조치에서 볼 수 있음.

정치제도 측면에서는 내각 중심으로 가려고 했음. 이건 조선에서는 기존에 없던 근대적인 개혁 조치였음. 여전히 정점에 국왕이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치들을 함. 그래서 왕실의 행정과 정부의 행정을 분리함. 왕실사무와 정부 행정의 사무를 분리시킴. 국정 of 중추적인 기관으로써 의정부로 중심에 놓으려고 함(나중에는 내각으로 이름 바꿈), 내각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해가려고 함, 전통시대의 정치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근대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지방에 대한 지배 역시 행정구역을 더 분명하게 해서 지방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개혁정치도 볼 수 있음.

근대적인 상공업 육성을 위한 개혁조치들도 평가받을만함. 국가의 재무행정 역시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분리함. 국가재정을 분리해서 상공업 육성과 같은데에 효율적으로 쓰고자 함. 은 본위제 도입, 조세를 더 이상 쌀로 내지 않고 돈으로 내게 하는 조세의 금납화 실시. 근대적인 국가 재정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 부처로는 농상본부를 신설해서 근대 산업의 육성을 도모함. 정부 차원에서 상공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시도들을 함.

군사제도의 측면에서는 상비군 제도, 신식 군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경무제(경찰제도), 경찰제도를 확립하려고 함.

근대적 교육제도, 학교제도를 수립함, 과거제를 폐지한 것과 맞물림.

신분제를 폐지함. 과부의 재가 허용. 조혼 금지.

정리를 해보면, 갑오개혁, 그것을 주도한 세력, 갑오개혁의 내용은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한 세력, 일본의 개입이 항상 노정되어 있었고, 일본의 지원을 받는 현실 아래서 이루어진 개혁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근대화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었음. 갑오개혁 자체가.

갑오개혁 자체가 독립협회 운동의 선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한제국 시기에 이루어졌던 광무개혁의 어느정도의 기초는 갑오개혁이 세워줬다고 볼 수 있음.

[7 주차 근대 국민(민족)국가와 왕권]

1 차시 Page 2

국민국가는 서구에서 시작되어 들어오게 된 개념. 당시 동아시아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운동가들이 지향했던 모습은 서양이 먼저 달성한 근대 국민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정치상은 다양한데, 당시 서구에서 도달했던 정치상은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왕조국가를 극복한 정치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머리속에 염두해두고 근대 국민국가가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동아시아의 개혁가들이 생각했던 근대 국민국가는 무엇? 전통적인 타입의 왕조국가는 극복을 하되, 구 체제의 모순 같은 것들, 신분제적인 차별이 법률적으로 폐지가 된 모습을 구상. 결국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개념, 이 원칙이 관철되는 사회를 머리속으로 구상하고 있었을 것임.

그와 더불어 국가 입장에서 국민을 국가에 충성하는 근대적인 주체로 만들고 싶었음. 그러다보니 각종 교육이나 사회 정책들도 국가가 실시함. 왜 실시? 특정 집단에 거주하는 주민집단을 국민으로 동원하기 위한 장치. 애국심을 함양시키고. 이런것들 역시도 국민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정리를 해서 얘기해보자. 근대 국민국가란 무엇인가? 근대 국민국가는 국내적으로는 국민주권, 대외적으로는 국가주권을 가짐.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라는 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의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국민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함.

두번째로는 근대 국민국가라 함은, 가족, 학교, 종교 등 국가 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그런것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균질적이고 평준화된 국가적인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 외부에 대해서는 우월한 독자성, 문화적 차이를 교육을 통해 강조함.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역할.

세번째로는 근대 국민국가의 정치체제는 반드시 국민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민주국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민 국가의 여러 형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있음. 프랑스의 공화정이나 영국의 입헌군주정,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으면서 확산된 것이기 때문.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면 공화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체제상이 굳어진 경향이 있었음.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과는 모순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민주 공화정이어야 해 라고 한다면(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많은 개혁운동가들이 그걸 지향함. 그러면 왕이라는 존재는 국민국가 수립을 저해하는, 민주 공화정과는 모순되는 존재라고 생각되기 쉬움.

한국의 경우는 특히나 서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굉장히 오랜기간 중앙집권적인 왕조국가 체제였음.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운영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강고한 정치문화였음. 19 세기 후반에 열강의 침략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서양 문물의 유입이 있었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국가의 수립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다가왔음. 그랬을때 우리는 전통적인 왕조국가 체제의 역사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국가최고권력기관으로써 왕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음. 근대국가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왕,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었던 왕과 왕권은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서 저해될수도 있고, 민주공화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부정되어야 하는 존재임. 결국 왕권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만 직면했던 문제는 아님. 근대 공화정의 대표주자인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음. 100 년의 기간동안 공화정 체제가 유지되었음에도 그 사이 왕정 복구나 제정이 반복되었음.

왕권, 왕의 존재는 민주공화정을 지향하고 근대국가로 이행하는게 시대적 과제라 하더라도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

국왕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의 구상이 과연 가능한가?

한국의 경우에는 1884 년 갑신정변 당시부터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까지, 좀 더 멀리는 3.1 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국왕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가 구상,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개혁은 끊임없이 있었음. 적어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국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국왕의 존재를 상존하지 않고 근대국민국가를 구성한 적이 없음. 여러 구상들간 차이는 있었음. 왕권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지, 왕이 정치권력의 중심이 될 것인가 등등. 하지만 왕이 없는 정치제도를 상상하게 된 것은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임. 갑신정변때부터 3.1 운동까지는 국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있었던 적이 없음.

국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왕위에 있던 고종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고종을 정치적으로도 지원하고 지지했다는 뜻은 아님. 고종에 관한 견해가 아니라 왕이라는 정치기구, 정치권력의 존재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달랐다는 것.

Page 4

고종이 친정을 선언함. 그 전에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주도하였음.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축출이 되고 친정을 선언한 이후 고종이 보인 행보를 살펴보자.

조선정부는 고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음. 1880 년 12 월에 통리기무아문 이라는 기구가 설치됨. 자강정책, 근대 개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써 설치됨. 통리기무아문에겐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가?

동도서기(동양의 도는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수용한다)론에 입각한 서기, 근대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됨. 당시의 국정과제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중심은 통리기무아문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

고종이 통리기무아문을 굉장히 중시했음. 고종의 이런 행보는 어떤걸 의미하는가? 왕인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과제의 수립을 직접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고종을 친정을 선언한 이래로 끝없이 자신의 군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음. 조선의 정치구조가 항상 그러했음. 조선의 정치사에서 군권(임금의 권력)과 신권간의 견제와 갈등은 항상 존재해왔음. 왕은 자신의 군권을 확보하려고 했었음.

19 세기 후반의 조선은 지배층도 마찬가지지만 인민도 마찬가지, 국민들 중 정치적인 영향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역량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군주권을 견제하려고 했던 관료들조차도 항상 그 속성 때문에 군권을 견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주권의 개념, 민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님.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세운 개혁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관료들과 내가 함께 주도를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음.

왕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라는 것을 수립하기 위해 고종은 노력하게 됨. 이런 고종의 노력조차도 쉽게 관철되진 못했음. 고종이 친정을 선언한 이후에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청의 존재가 있었고, 무력도발을 노리면서 청을 견제하던 일본도 있었음. 이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고종의 노력, 왕권이나 국가의 대대적인 자주권을 수립하고 확립하려고 하는 노력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음.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고종에게 좋게 돌아가진 않았음. 내부적으로는 왕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관료 세력이 있음. 왕권을 견제하는 것임. 그와 다르게 근대화 정책 자체, 서기의 수용 자체에 반발하는 양반 유생들(척사파)의 반발도 있었음. 지방에서는 농민반란도 일어남. 내부적으로도 왕이 국정을 주도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들이 있었음. 그렇다면보니 고종이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가족이 있었음(처족들, 민씨들, 보수관료들)

고종이 자신이 주도해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지기반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음. 그러다보니 나온 방법이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 정부의 기관 조직들(의정부, 6 조)을 통해서는 자신이 뭔가를 하기가 어려움. 궁궐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설치한 것이 통리기무아문이었음. 고종이 자신이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기구였음. 이 특별기구를 통해서 개혁정책을 왕이 직접 관장하고자 했음.

실질적인 성과가 크게 보였는가? 라고 할 때 의문이 남는 지점들이 있었음.

근대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가 크게 보였던 것도 아니고, 고종의 행보를 보면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근대국가로 이행이라는 과제를 역행하는 행보들도 있었음. 통리기무아문이라는 특별기구에 정치권력 자체가 편중되는 것. 왕이 그곳을 밀어주면서 정치권력 자체가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구조가 아님. 이게 근대국가로 바라보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남음.

근대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가족들(민씨)조차도 민생의 안정보다는 근대화 사업에 편중해서 민중에 대한 수탈에 직접 가담을 한 사람들도 있었음(민경호, 임오군란). 이런 부작용들이 쌓여서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도 초래함. 이런 위기상황을 인식했을 때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현명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 정부에서 청군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 좋은 판단인지 나쁜 판단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그렇지만 이런 판단을 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왕권도 위기에 빠졌고, 국권 자체, 국가의 자주권 자체도 위기에 빠졌음. 청나라가 개입하고 일본도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도 개입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

고종은 1880년대부터(개항한 이후부터) 자신이 주도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추구는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밖으로는 자주권을 침해하는 청이나 일본과 부딪혔고, 안으로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관료들과도 충돌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 조직이 왕권을 중심으로 결합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종의 관점에 동의하는 관료가 많지 않았음.

그런데 이것에 동의해주지 않는 관료들이라고 해서 왕권을 대신할 만한 강력한 정치사회세력이 있었냐고 하면 없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왕조국가의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왕을 대신할 수 있을만한 강력한 정치사회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

그러면 누가 근대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사람도 없었음.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면서 고종의 측근세력은 그의 가족이었음. 그들이 최고의 권력집단으로 부상했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종은 일본을 비롯해서 서양 열강과 조약도 체결하고, 개항도 하고, 이러는 한편 자신의 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친위세력으로 민씨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국왕의 친정체제를 강화했음.

안동 김씨가 득세를 했던 과거의 세도정치기와는 권력 구도가 달랐음. 고종이 자신이 주도를 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대외적으로도 고종이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님. 청에게 당한 자주권의 침해를 타개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임. 그렇지만 고종이 아니더라도 고종 주변에 청과 결탁한, 청으로부터 자주권 회복을 방해하는 수구파 관료들도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음.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 고종도 측근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특히 왕이 개혁을 주도하는, 왕의 국정주도에 반대하는 관료세력들 중에는 그와 청사진을 같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그렇지만 왕이 이걸 전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반대.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적인 개화파 세력. 이 사람들이 일본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왕권을 무력화시키는 쿠데타를 일으킴(갑신정변). 그 이후에 갑오개혁도 있었음. 갑오개혁도 고종이 자신이 주도한 국정개혁은 아니었음. 갑오개혁 자체도 일본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수행될 수 있었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왕권과 개혁관료들 자체도 청사진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음.

2 차시 Page 5

갑오개혁의 국가체제, 개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 개혁의 관점에서 갑오개혁이 그 이후의 대한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갑오개혁기의 국가체제부터 살펴본다.

갑오개혁은 왕인 고종이 큰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개혁이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점거하고 자신들의 뜻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김홍집 등, 친일파는 아님) 중심으로 내각을 만들었음. 군국기무처에서 개혁을 주도하도록 함.

이게 왕권과 관련해서 갖는 의미는, 경복궁을 무단 점거하고 내각을 세웠다는 것은 갑오개혁 자체가 고종이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한 개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개혁의 개혁조치들을 살펴보면, 당시 국가체제의 원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했냐면, 왕권을 기존보다 많이 제한하고 균질적인 국민을 형성하는 방향을 지향함. 그래서 당시 실질적으로 내려졌던 구체적인 조치들이 뭐냐면, 자주 국권의 확립도 있었지만 왕권을 제한하는 내각제도의 실시, 균질적인 국민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신분제를 폐지하고, 이데올로기를 전폐하기 위한 신문의 발간 이런 것들을 구상함.

갑오개혁에서 있었던 조치 중 고종의(왕의) 권한을 가장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조선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특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사상적으로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었음. 세금이 거두어들어지는 통로를 '탁지부'라는 곳으로 일원화를 시키려고 함. 갑오개혁 당시에는, 그래서 왕이 재정을 통해서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됨.

후반중척은 외척을 포함하는 것임. 그러니까 왕후의 친척들까지 다 포함됨.

이러한 조치들이 이상적으로 봤을때는 근대 국가로 나아간다고 할 때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조치인 것은 맞음. 그렇지만 조선의 전통적인 정치 체제라는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켜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왕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의 입지까지 위협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음.

조선은 집권적인 왕조국가의 역사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재워하고 있는 왕은 항상 왕에 대한 충성심은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음. 근대적인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을 형성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신분조사를 폐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교육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혁들도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의 정신상태, 머릿속에는 항상 국가의 구심점,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가 자체라기보다는 국왕을 향해있었던 역사가 훨씬 길었음. 국가=국왕인 인식이 굉장히 오래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왕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켜버리는 조치들은 지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그리고 국왕 자신 역시도 이 부분에서 반격의 조치를 취하게 됨. 그 반격의 조치가 바로 아관파천이었음.

갑오개혁도 아무리 고종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하더라도 개혁조치 자체에 도장을 찍고 승인시키는 마지막 역할은 왕에게 있었음. 왕이 여전히 정치적 구심체였음. 그런데 그 구심체였던 왕이 자리를 비워버림. 개혁이 흐지부지됨. 왕권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급진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었음. 그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보다는, 그래서 고종은 반격으로 아관파천으로 자리를 비워버림.

그런 상황에서 고종은 그래도 국왕이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쪽으로 힘을 끌어모으고 다시 자신이 구심체가 되어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구상을 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됨. 그러면서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도 수립하고 광무개혁도 추진하게 됨.

갑오개혁기~아관파천이 있던 시기, 대한제국 초기까지도 대중적인 호응을 받았던 사회운동들이 있었음.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운동. 이런것들을 추진했던 사회 운동 세력은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관료세력과 거리가 멀지 않음. 지향하는 바도 같았음. 그런데 국정 밖에서 사회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운동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대중적인 호응을 상당히 받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왕은 역시 국가의 구심체였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로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힘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음. 국민 통합의 상징(충성의 대상)은 어쨌든 왕일 수밖에 없었음. 이것은 그만큼 조선에서는 왕이라는 존재가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매우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종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광무개혁, 그게 독립협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고종이 아관파천 1년 이후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한다. 이른바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한다. 대한국국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제군주권, 왕권의 권한, 위상을 글로 적었다, 성문화했다는 것에 있음. 조선왕조는 창건 이래에 국가의 최고권력자가 왕이었음. 그런 최고권력자로서 국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조항으로 규정되었던 적이 한번도 없음. 그만큼 당연하고도 강력하게 보장된 것이었음. 왕의 권한은, 그래서 경국대전이 조선 왕조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인데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국왕의 권한은 신하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법조항 속에 암시는 되고 있지만 국왕의 권한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명시된 곳은 없음.

그런데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의 정치체제, 황제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음. 왜?

전제군주권이라는걸 성문화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황제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측면이 있다. 그전까지는 보장할 필요가 없었다면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이 있음. 이것은 결국 향후에 고종은 각종 왕권에 대한 도전을 겪었음. 고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이미 몇번 겪었음.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수립을 계기로 황제의 자리에 스스로 오른 것을 계기로 황제의 권한을 법적으로 공인함으로써 정변을 방어하려는 의도도 있었음.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일정정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쿠데타의 주체가 대한국국제에 대한 개정,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기가 어려워진다. 헌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 곧바로 쿠데타를 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치 중 하나였음.

그렇지만 여기 숨겨진 또다른 측면은 역시 황제권, 전제군주권이라는 것에 대해 법력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전제군주권을 지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대한국국제 반포 외에도 고종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면 황제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격의 것들이 꽤 있었음. 황제권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구들을 설치함. 원수부와 경위원. 국왕의 친위대. 원수부는 군대 친위대, 경위원은 경찰 같은 역할의 친위대. 황제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인 억압기구를 설치함. 그 외에도 황제권을 상징하고 널리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써의 황제권 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작업도 함. 예로 중국의 황제가 했던 것과 같은 의식을 치름. 평양에 대한행궁을 지어서 행사를 치루거나, 환구단을 지어서 황제만이 올릴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시행함. 황제권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음.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가'를 만들도록 함. 국기 외에도 황제권을 상징하는 어기, 친화기, 군기 같은 것들도 만들. 황실문양도 만들.

황제를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장치,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음.

신민, 황제에게 충성하는, 국가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신민 만들기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나 정치제도를 유교 이념이 지배했음. 그걸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님. 그러려면 과거제도를 복구하던지, 신분제적인 유교적 사회질서를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신민 만들기였음. 황제에게 충성하고 나라에게 충성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뜻을 담은 교지. 전통적인 사회로의 회귀를 지향한건 X

다시 고종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궁내부라는 기구가 굉장히 커짐. 갑오개혁때는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했음. 그러면 내각, 혹은 의정부와 같은 국가 기관조직의 힘이 커짐.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됨. 왕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제국기에는 의정부보다 궁내부가 훨씬 압도하는 방대한 기구로 확대됨. 의정부를 대신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기구가 됨.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종이 친정체제로 들어서면서 개혁 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설치한 것이 통리기무아문이었음. 이 기구들은 모두 국왕이 주도해서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의 특별기구였다.

대한제국기에 궁내부가 의정부를 대신해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담당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기구, 국왕과 가장 가까운 기구 하나를 집어서 그 기구가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양상이 똑같이 재현됨.

이런 특별 기구들이 강력한 권한과 국왕의 뒷받침으로 국정을 지도할 때 분명 장점도 있음. 개혁 조치들이 빠르게 추진이 되고, 일원화되어서 추진이 된다는 것.

그렇지만 대한제국기에 나타났던 문제점도 있었음. 국가기구의 구조 자체가 이원화된 측면이 있었음. 국왕의 친위대로 원수부를 설치했었음. 사실 군정기관인 군부가 이미 있었음. 국가 기관으로써. 원수부가 군수 하에 들어간 것도 아님. 군부와는 상관없는 독립적인 기구로 원수부를 설치함. 군사기구 자체가 이원구조가 되어버림.

경무청 산하의 경위원과 육군 헌병이 있었음. 경무청이 있고, 경위원이 있고, 군경찰로써 육군 헌병은 따로 있고. 다원구조가 됨. 경찰기구도 어디가 주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됨.

외교의 측면에서 볼때도 전통적으로 외교를 담당해왔던 기관조직은 예부였음. 이게 외부로 갑오개혁때 이름을 바꿈. 대한제국때는 예시관이라는 다른 기구를 설치함. 외교기관도 이원구조로 분리가 됨. 이러다 보니 여러 기능들이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 국정운영의 혼란은 어느정도 초래될 수밖에 없었음.

재정의 문제를 보자. 갑오개혁때는 탁지부가 국가 재정의 모든 것을 관장했음. 그런데 대한제국 수립 이후 내려진 조치들을 보면, 돈을 찍어내는 권한(화폐 주조권), 전매가 되던것들 중 홍삼에 대한 전매권, 등 각종 세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재원인데 핵심적인 국가 재원들을 가지고 황실의 재정기구가 관할하도록 관할기관을 옮겨줌. 당시 황실의 재정기구가 내장원이었는데 화폐주조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들과 세금에 대한 권한들이 내장원으로 집중된다. 그렇게 되면 갑오개혁 당시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을 분리했었음. 그러면서 대부분의 것을 국가재정으로 가도록 했다. 이걸 돌려버리니까 국가재정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음. 거두어지는 세금이 많아진것도 아닌데 그걸 황실재정인 내장원으로 집중시키면 당연히 국가재정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음.

이렇게 국가기구가 이원적인 구조인 문제, 국정운영의 권한이 궁내부로만 집중되는 문제와 더불어 재정의 문제도 있었음.

이런것과 별개로 맞물려서 일어났던 문제는 뭐냐면, 당시 고종이 황제로써 행사했던 인사권도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감. 결과적으로 볼때는. 개혁조치들에 도장을 찍고 관할하는 고위 관료들이 황제의 의향에 따라 광강히 빈번하게 교체됨. 그런데 당시 공문서들을 보게되면 교체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임. 이 10 명의 사람들은 황제의 측근 인물들. 황제의 의향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행사했음. 황제가 기용했던 인물들을 보면 이용익, 이기동, 이근태 ..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배경을 가지고 있음(세도가 출신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눈에 들어서 고속으로 승진함. 단 시일 내에 정부 고위관료급으로 이를 수 있게 됨. 왜 황제 픽이 되었을까? 자신의 정치 행보 같은 것들을 떠받쳐줄 가문의 힘이 없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존의 세도가문 출신의 관료들은 자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음. 그런데 뒤에 그런 집안 배경이 없는 관료들은 황제의 신임에 매달리게 됨. 그거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으니까. 황제의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시 소수였던(10 명 내외) 자기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황제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됨. 그래서 황제픽이 됨. 이걸 기존의 세도가문 출신 관료들이 봤을 때 불만이 생김. 측근정치를 하게 되면 불만세력이 생김. 거기다 불만세력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배경이나 입지가 낮은 사람도 아님. 자신들만의 불만을 가진 층들이 자신들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 그래서 서로 극렬하게 권력다툼을 함. 이런 치열한 권력다툼은 국정 운영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밖에 없었음.

3 차시 Page 7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 헌법을 살펴보자.

Page 8

1889 년에 제정된 일본제국헌법

일본제국헌법과 대한국국제는 공통점은 있음. 황제가(일본은 천황) 신민한테 부여한 헌법의 형식을 취한다라는 점은 같음. 대한국국제 역시 황제가 부여를 한 것임. 위로부터 부여된 헌법이라는 점은 같음.

제국헌법 2 장을 보자. 이렇게 제국헌법은 대한국국제처럼 위에서 부여한 헌법인 것은 동일하지만, 신민의 권리와 의무 같은 것들이 제정되어있음. 뒤로 더 가보면 의회에 대한 규정과 의회의 권한 같은 것들이 있음. 사법권에 관한 것들도 있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국 헌법에는 근대 헌법에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요소, 그리고 신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이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대한민국제에는 삼권분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제 4 조를 보면 복종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는데, 신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제국헌법과 대한국제 사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경우 이 제국헌법이 형식적으로 위에서 부여한 것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1889 년, 제국헌법이 제정되기까지 10 년여의 기간에 걸쳐 격렬하게 자유민권 운동이 진행되었음.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제정된 헌법이 제국헌법이었음.

대한제국의 경우에는 민권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님(만민공동회 운동).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음. 1 년정도. 내적 영향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자유민권운동이 10 년간 이어졌던 일본과는 상황이 달랐음. 이런 것을 꼭 이끌어가서 정부를 압력할만한 내적 역량이 부족했다. 대한제국의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국제의 전향적인 측면은 황제권을 성문화했다는 부분. 비록 이걸 전제군주권이라는 성격으로 성문화를 해버렸지만,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조선왕조 오백년동안은 왕권의 존재, 왕의 무한한 권한 자체가 전혀 의무시된적이 없었음. 그게 우리 전통시대의 정치 체제였음. 그런데 이걸 성문화했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임. 그러나 이것은 최고권력이 그걸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위기감을 느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전제군주권, 의무시된적이 없었던 황제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최고권력 스스로도 느꼈다는 것은,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민권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했던 만민공동회 운동 같은 것들, 독립협회 운동의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결국 정치권력에서 밀려서 운동자체는 1 년정도밖에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민권개념도 확산되었고 황제권도 위기감을 느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Page 9.

대한제국의 정치구조는 통치기구의 이원성, 대한제국의 정치세력의 불안정함, 불안정한 정치권력의 구조와 같은 것들이 자주 노출됨. 결국 황제인 고종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가기구를 황제권을 지키는, 자신을 위한 사유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 왕권의 무한함을 굉장히 당연하게 사유하고 생각했던 사람임 고종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녀야 할 공공적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근대인으로써 가지고 있는 관념이지, 그게 당시 고종황제에게 정당한 명분으로 수용되고 승인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근대국가로의 개혁을 지향하고 추진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통치권력을 장악하고 재정권,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법론 자체에서 오는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었음.

대한제국이 백성의, 신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가? 별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음. 충군애국을 고양시키려고 여러 조치들을 했지만, 결국 대한국제에서 봤듯이 신민이라는 존재가 국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 그런 국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나와있지 않음. 인민은 무권리한 상태. 그러다보니 황제권력은 계속 강화되어가는데,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백성에 대한 수탈, 부정부패 같은 것들은 계속 심화되어가고 있었음.

재판제도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인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조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개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국가로부터 내 권리를 보장받는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대한국제 헌법에도 인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조항은 없음. 이런것들로 인해서 대한제국 정부가 백성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가 라고 하니면 그렇지 않았다.

백성들에게조차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종 충성의 의무만 얘기하고 재산, 생명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결여된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구상했던 국민국가는 그 구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었음.

황제권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독립협회 세력(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세력과 많이 겹침) 두 세력은 어디까지나 최고권력의 권한, 황제권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일 뿐이지 근대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국가 모델로 국가개혁을 해야한다. 라는 지향점은 동일했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제도 측면에서 과거제도와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 근대적인 관료제도를 구상하는 것, 청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양쪽이 같았음.

경제구상도 마찬가지. 상업의 진흥, 농업이라는 것도 시스템을 다르게 해서 진흥시키는 경제 구상, 토지에 대한 조사도 다시해서 정리, 이런 경제구상에 있어서도 양자의 입장은 거의 같았음.

그렇지만 정치제도의 측면에서 국가권력을 관료중심으로 가져갈건지, 황제가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대립의 분기점이었음.

그런데 관료중심을 지향한다고 하는 세력조차도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써의 왕권, 왕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음. 양자간의 대립의 지점이라는게 굉장히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왕권이라는걸 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대립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습.

그런데 왕권이라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했기 때문에 양자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국정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노출되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결정적인 약점을 꼽자면, 국민적인 통합(관료를 포함해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게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

1904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고종이 추진했던 대한제국의 구상, 개혁 이런것들은 다른 단계로 이행할 수밖에 없음. 국가 존망의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이 다시 한국에 주둔하게됨. 러일전쟁이 끝나고도 군대를 빼지 않고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보호통치 단계로 들어감. 국가 존망의 위기가 닥침. 황제권도 같이 흔들리게됨. 개혁을 추진하려는 또다른 세력에 있어서는 황제권을 다시 축소시키고 전제군주정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 국민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아닐까 라고 인식될 수도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보호국으로 전락하긴 했지만 완전히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었음. 그러기 때문에 1910 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세력들이 각종 사회운동을 함. 애국계몽운동, 자강운동(대한자강회) 등. 이런 단체들이 새로 수립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근대국가의 정치체제가 뭐냐고 했을 때 왕권을 축소하는, 그러나 왕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 입헌군주제라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정치체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함.

여러가지 운동단체들, 정치세력들이 정치체제로 입헌군주제를 얘기함. 식민지화되기 전까지.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러일전쟁 이후에 일어난 국내의 정세변화라는게 한국에 있었던 당시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독립협회가 실패로 돌아감. 그때 좌절된 근대 국가체제의 구상을 다시금 전개해나갈 수 있는 시기였던 것은 맞음. 러일전쟁 이후의 시기.

입헌군주제는 왕의 위상을 부정하는건 아님. 그리고 이들도 국왕권 자체를 전복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그렇기에 그들이 얘기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도 황제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황제권의 사적 성격,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했던 스타일, 그 사적 성격을 비판하고 국가의 성격, 공공적인 성격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근대 전환기에, 근대 국가로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국왕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자연인으로서 고종, 순종 이것과는 구분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왕은 어디까지나 국가 권력의 담지자로서 최고 주권을 채현하고?있었던 일종의 기관이었다. 고종, 순종 개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 누군가가 국왕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해서, 혹은 그 국가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인민은 그대로 있음. 그랬을때 오히려 새롭게 들어선 정치체제가, 국가 지도 체제가 그 인민들의 생명권, 재산권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보장해준다면 인민들은 정체성의 혼란은 느끼겠지만 그 현실에 적응해나가게 된다.

근대 국민국가라는 것을 수립할 때 그걸 왕이 직접 주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한계를 조금 안고 시작하는 것임. 우리가 알고있는 근대 국민국가의 대표적인 모델은 공화정, 입헌군주정임. 왕권이 상당히 전통시대보다는 축소되는 모델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체제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역량 같은 것들이 성숙되면 근대 국민국가로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왕 그 자신도 언젠가 무력화되거나 타도되거나 해서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으로 이행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경우는 하필 그 과정에 외세가 대입했다. 그런데 개입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 갔는가 라고 하면 정치권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일부 관료들과 결탁해서 극단적으로 왕권을 위협하거나, 제약을 가하거나 왕비를 죽임. 그렇게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인민들은 거기에 엄청난 반발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일부 개화파 관료들이 진행했었던 갑신정변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의 갑오개혁도 마찬가지였고, 이후 독립협회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 운동들은 내용만 두고 봤을때는 상당히 그 시대로서는 선진적인 정치의식과 전망을 가지고 있었음. 신분제도를 폐지했고 입헌군주제까지 생각할 정도였음. 매우 파격적이고 선진적인 정치 의식과 전망을 가지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100%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는가? 그렇지 못했음. 왜? 거기 외세가 개입해 있었기 때문. 일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유도 주로 그런 쪽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8 주차 근대 서양 문물의 도입]

1 차시 Page 2

조선은 미국과 1882 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 1876 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서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음.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선정부에서 했던 것은 83 년에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함(보빙사 -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 보빙사가 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나? 뉴욕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두차례 회담을 함.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기술공업박람회나 시범농장(신식 농법) 방문, 산업화를 상징하는 공장, 군시설(해군연병장), 병원 등등 근대화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시설들 방문해서 시찰함.

당시 보빙사 사절단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봤던 것은 우편제도가 대표적. 전기시설, 학교, 특히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업 기술 같은 데도 관심이 많았다고 전해짐.

보빙사절단이 미국을 다녀오고 나서 실제로 조선정부의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우정국(우편제도 도입), 궁궐에 전기설비를 함, 목축시험장 설치.

이렇게 보빙사절단을 보내본다던지, 이 이전에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수신사라고 해서 일본에도 사절단을 보내고, 청도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에도 영선사를 보냄. 이렇게 근대문물들을 각방면으로 접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시기였음.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근대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는데, 근대문물이 우리나라 기존에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있음. 대표적인 것이 활명수. 근대시기에 새로 만들어진 약품.

당시 정부에 민병호라는 사람이 있었음. 민병호라는 사람이 한방에 있는 소화제에다가 포도주랑 설탕을 섞어 만든 것이 활명수임. 그전까지는 원래 약이라는 것은 다려서 먹는 탕약이 많았음. 그런데 활명수는 병에 들어있는 약,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이었음. 이게 당시로서는 신기했음. 처음 나왔을 때는 만병통치약으로 많이 이야기되었음.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새로운 문화도 생기게 됨. 우리나라 전화 예절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도 통화 상대방이 어른이거나 나보다 윗사람이면 두손으로 받음. 외국인으로서 한국식의 예절을 수용해서 활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뮐렌도르프.

서례수지는 서양의 예법이 담긴 책이라는 뜻. 영국인이 1886년에 쓴 책을 들여와서 간행한 것임.

이렇게 서양의 근대문물과 만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 인식부터 시작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나 교육의 내용, 교육의 제도, 음식문화 이런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개항 이후부터(19세기 후반부터).

Page 3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도 서양을 알아야 한다, 서양에게 이렇이러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나옴. 그런 지식인들이 쓴 대표적인 서적이 조선책략.. 등등. 이것과 더불어서 출간된게 중국도 아편전쟁 이후 서양과 조약을 처음 체결했으니, 서양 국제법의 원리를 담은 만국공법이라는 도서도 등장함. 이게 조선에도 일본에도 전해짐. 서양이 생각하는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를 일정부분 설명해줌.

만국공법은 주권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국제질서의 기본 원리로 설명하고 있음.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서양 열강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따라가보면 모든 나라를 문명국, 반문명국, 미개국으로 서열화함. 자신들의 시야에서. 그러다보니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보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산업화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던 동아시아 각국은 어디에 해당할까?

동아시아 삼국은 만국공법에 나타나는 국제질서의 원리를 소화해서 정치, 법률, 외교 통상 등에 일정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었음.

전통시대부터 중화를 자처했던 청나라는 만국공법을 들여와서 번역출간까지 했음에도 불가하고 상당기간동안은 대외관계를 위해서 번역을 해서 살펴보는 지침서 정도로 간주했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화친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 미국과 또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 미국과 처음 맺었던 이 조약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음. 그러다보니 만국공법을 어느정도 익힌 상태였음. 그래서 어떻게든 그때 맺어졌던 불평등한 조약을 대등한 조건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만국공법을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함. 아울러 조약도 개정하고, 그걸 발판으로 우리도 서양식의 근대국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국공법을 적극적으로 참고함. 만국공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아주 나쁘게 없었기 때문. 만국공법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 역시도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거부할 명분이 됐음. 만국공법에 따르면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대등해야 하기 때문. 일본은 그것을 참고하고,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조선을 개항시킬때도, 갑신정변을 뒤에서 몰래 조선할때도 조선에게 계속 요구했던 것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었음. 만국공법을 그런식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함.

조선에서도 만국공법의 논리를 많이 활용함. 활용을 한 맥락은 달랐음.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행위, 그런것들을 비판하고 주권을 수호하려는 근거로 만국공법의 논리를 많이 이야기함. 특히 조선 같은 경우 나중에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에 휘말리면서 국가적인 위기사태를 겪게 됨. 특히 러일전쟁 당시에는 만국공법 중에서도 중립조항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용하려고도 했었음.

만국공법은 엄연히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들을 서열화하고 있음. 근대화, 산업화의 척도에 따라서. 이것은 더할나위 없이 사회진화론(강한 자가 살아남는다)의 논리임. 이 국가서열화 역시도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 특히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반문명국이나 미개국을 우리가 문명으로 이끄는 것인, 선의의 정책이라고 합리화를 많이 했음. 만국공법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음.

그리고 국가간의 약육강식의 논리. 문명국이 당연히 반문명국, 미개국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임. 문명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음. 만국공법이 이런 사회진화론에 기반하는 국가의 서열화를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많이 있었음.

이것이 읽혀지고 활용되던 시기가 19세기 후반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사회진화론이 당연한 진리처럼 함부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됨.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논리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음. 그런데 19세기 후반의 사회는 그렇지 않았음. 상당히 사회 진화론에 기반한 인식이 만연한 시기였고, 그랬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 역시도 서양열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명국이 아니고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들이 한중일 삼국에도 각각 맥락은 다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수용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음. 특히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2차시 Page 4

언론과 학교 역시도 근대 서양문물을 통해서 도입된 대표적인 근대 산물임.

신문이 당시 처음 발간되기 시작함. 신문 같은 경우는 국내외의 소식을 대중적으로 알려주는 새로운 통로였음. 동아시아 삼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신문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보도되었는지 살펴보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가 조계지(개항을 하고 외국인들이 거류를 할 수 있게 설정된 지역)였는데, 이 상하이에서 영국인이 창간한 '신보'라는 신문이 처음 등장함. 당시 신보를 많이 보고 지원을 했던 층은 주로 서구적인 방식의 근대 개혁을 추진했던 세력. 중국 내에서는 변법자강세력이라고 함. 이 세력이 신문과 잡지와 같은 매체의 창간을 후원하고, 거기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영국인들이 창간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해외 소식, 특히 서양 열강의 소식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매체들도 있었지만, 일본 언론들도 생기게 됨. 일본은 조금 더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검열이나 발행금지조치 같은 규제들이 있는 편이었음. 그러다보니 신문에 국내 정치나 여론의 보도 보다는 사건사고나 소설 같은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음. 일본 국내외에서 발행되기 시작하는 언론들을 보면, 국외 보도로는 주로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같은, 일본이 승전한 소식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했음.

조선의 경우 해외매체도 있었지만 서양의 입장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주요한 해외 거점지역이 아니다 보니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은(주로 잡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음. 그 대신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가 등장할 하게 되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한성신보'를 발간함. 한성신보의 내용은 주로 정부의 개혁정책, 근대문물을 소개하는 것이 주됨. 한성신보가 등장한 이후에 민간에서도 신문들이 발간됨. 최초의 민간 신문은 서재필이 주관이 되어 창간했던 '독립신문'임. 독립신문의 내용은 주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내용. 독립협회 세력에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끼친 신문으로 알려져 있음. 정부도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도 정부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음. 그 이후에는 '황성신문'이 발간됨. 순한글신문은 아니었음. 황성신문은 1898년에 창간됨. 국한문혼용체를 채택했다는 것은 주요 독자층을 어디에 두고있느냐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 황성신문은 한문도 읽을 수 있는, 혼용된 것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을 갖춘 지식인 계층을 겨냥해서 발간된 신문임. 황성신문의 논조는 대한제국정부의 개혁 노선을 기본적으로 지지함. 그러면서도 비판적 지지라고 할 수 있음. 우리사회에 아직 이러한 폐단이 있고 이걸 수정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 정부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비판적 지지라는 논조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한문혼용체긴 하지만 여전히 계몽적인 내용도 유지하고 있었음. 19세기 말 대한제국기를 보면 매일신문, 제국신문과 같은 민간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창간이 됨.

황성신문은 독립신문이 쫓 발행되고 있었는데 독립신문의 주필인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독립신문의 발간이 어려워짐. 새로운 신문을 다시 창간을 해서 기존의 논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독립신문 뿐만 아니라 지식인층까지도 우리의 지지세력으로 규합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신문을 발간을 했던 세력들이 새롭게 창간을 한 것이 황성신문임.

황성신문 창간호 사설에 보면, 우리는 정부의 개혁 노선을 지지하면서 그걸 실천적으로 실천수범 하겠다는 뜻을 밝힘. 당시의 정부의 개혁노선이라 함은 '구본신참'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 옛 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것을 더한다는 의미.

이런 신문들이 실제로 여론 형성을 하고,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을까?

실제로 여론을 형성해서 관철을 시킨, 신문사에서 생각한 뜻을 관철시킨 예가 있음. 예를 들어 1904년에 일본인이 한국에서 황무지를 개척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 공사관을 통해서 대한제국 정부에 요구한 일이 있었음. 당시 나라는 존망의 위기에 빠졌다는 위기 의식이 있던 시기. 황성신문은 이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설로 보도함. 실제로 그걸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남. 신문이 상세하게 보도를 해서 반일 의식을 많이 고취시킴. 이걸 근거로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측의 요구를 철회시키게 하는데 성공함.

반일 의식 같은 것들을 고취하는 여론 형성에 황성신문이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시일야방성대곡(을사조약에 반대한다)가 황성신문에 실림. 그러고 체포당함. 이런식으로 여론을 주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음.

신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니, 언론에 대해 대중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양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당시 황성신문의 재원은 주식을 판매해서 마련한 기본 자본금과 신문 구독료 정도였다. 구독료는 바로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밀리는 사람들이 많았음. 늘 적자로 운영되었음. 그래도 황성신문은 12년 6개월정도 지속된 대표적인 개항기 이후 장기간 발행된 대표적인 언론사 중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

학교 역시도 처음으로 정부의 개혁 정책이 도입되면서 서구식 모델로 들어오게 된 교육기관임. 개항기에 서구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학교가 지향했던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교육이었음. 충군애국하는 국민교육을 지향함. 갑오개혁기때 나왔던 교육입국조서에 보면,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며 독립하여 위세를 가지고 남을 내려다보는 여러 나라들은(열강) 모두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발달하였다. 라고 얘기함.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치함. 근대적인 학교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었다.

서양의 근대문물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직접 학교를 설치해서 국민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이때부터, 서양 근대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생겨남. 그때부터 확고해짐. 그래서 갑오개혁이 됐든, 대한제국기의 광무개혁이 됐든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 시책중 하나로 포함되기 시작함. 국민교육이라 함은 충군애국, 국민형성을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

Page 5

철도가 왜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가?

근대 이전, 전통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죽을때까지 거주를 함.

철도가 등장하면서 이런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됨.

한국인 중 기차를 처음 접하고 타본 사람은 김기수. 김기수는 1876년 조선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한다(외교 사절단). 이 수신사의 대표가 김기수였음. 김기수를 대표로 하는 수신사 일행은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함. 요코하마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간 곳이 바로 도쿄임.

철도는 1825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짐. 청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 1870년대에 처음 철도가 생김.

한국에 최초로 개통된 철도는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 경인선은 미국의 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도 부설권을 조선 정부로부터 얻음. 1897년부터 귀공이 시작됨. 99년 9월에는 노량진과 인천 사이를 잇는 구간이 최초로 영업을 개시함.

경인선 같은 경우 처음에는 미국인이 부설권을 얻어서 귀공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회사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됨. 1906년에 일본 쪽으로 국유화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경인선으로 불리기 시작함.

인천은 개항장이 된 곳(외국 선박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기서 서울로 바로 올 수 있는 철도가 경인선임

이동의 시간과 거리감을 굉장히 크게 단축시킴. 기존까지는 운송로가 강을 따라서 조성된게 주 운송로였는데 여기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옴. 경인선 이후 철도들이 쭉 개통되면서 주요 도시도 바뀜. 대전은 주요 도시가 아니었음. 철도가 대전을 지나게 되면서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됨.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거주지와 근무지가 분리됨.

철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난 변화는 시간 관념. 근대의 시간 관념이 확산되는데 철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 열차 시간을 보고 내 생활을 정해야 하기 때문. 언제까지 일을 가야 하는지 등등. 경인선 운행하는 시간을 동경 표준시를 적용함. 기차가 도입이 되면서 오전 9시, 오후 2시와 같은 시간 관념이 생기게 됨. 기차 외의 학교도 일조함. 학교에서 표기하는 날짜와 시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력 날짜를 채택하기 이전부터 서구식 양력을 사용했음. 근대적인 서양식 시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좌측인묘진사오미의 시간관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9시 10시 1시와 같은 서구식 시간관념이 학교나 철도 같은 근대 문물을 통해서 정착되고 확산됨.

조선 정부가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6년부터임. 양력을 사용하긴 했지만 음력을 오랜 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음력도 여전히 함께 사용되고 있었음. 그치만 서구식 시간관념이 확산되면서 시간 같은 경우는 도시의 주요 광장이나 건물에 시계탑이 등장함. 특히나 철도 역사에는 주로 큰 시계탑이 있음. 열차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까. 이런 시계탑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음력이 길게 함께 간것에 비해 시간관념은 굉장히 빠르게 정착되고 확산됨. 음력은 아시아 농업사회에 맞는 절기를 가지고 있음. 시간과 달리 음력이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것은 농업사회의 양식,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봐야함.

3차시 Page 6

19세기 후반 같은 경우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이 서양 국가와의 교류가 그 이전시기보다 빈번해지면서 음식문화 자체에도 큰 변화들이 보였음.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음식에서 주로 사용했던 피쉬소스(케찹으로 변화)가 서양에 전달됨. 일본 같은 경우 서양의 음식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것으로 변형시킨 것이 꽤 많음. 포르투갈의 빵을 받아들여서 단팥빵을 만듦. 돈까스도 일본식으로 한거임.

이런 형태의 변형된 음식을 화양절충요리 라고 많이 불렀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음식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조일수호조규를 1876년에 체결하게 됨. 이게 워낙 불평등하다 보니, 조선 정부도 낫 놓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선박에 대한 세금을 메기는 것과 수출입 물품에 관세를 면제했던 것은 재협상을 시도하고 실제로 조금 받아들여짐. 1883년에 조일통상장경을 다시 체결함. 아주 많이 불평등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너무 말도 안되는 것은 어느정도 극복이 됨. 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 조약을 완전히 체결하기 이틀 전쯤에 서울 북촌에서 만찬을 벌임. 외교만찬을 열었음.

상차림 자체에서 서양식으로 한 것이 보임. 주요 음식 다섯개는 조선식 음식임. 19세기 후반이 되면 청과 일본도 개항하고 조선도 개항함. 외국 문물이 엄청나게 들어옴. 그 전까지는 외국음식과의 교류가 접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님. 어느정도 있었음. 아주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서양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경로들이 많아짐. 개항을 하게 되면서 외국의 식재료, 식음료들도 많이 도입됨. 대표적으로 밀가루, 면류, 일본에서 쓰유나 미소 같은 장. 설탕, 시럽, 녹말, 과자 같은 것들이 들어옴.

이 그림에서 주목되는 것은, 참석자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음. 그림의 왼쪽에 보면,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민형목 이라는, 통상교섭사무를 하는 독판직에 있다. 그리고 민형목 옆쪽으로는 서양인 뮐렌도르프가 앉아있음.

민형목의 자리(상석)가 가장 높고, 차석 좌우가 뮐렌도르프, 멀면 멀수록 위계가 낮아지는 이 규칙은 철저히 조선의 규칙임. 그래서 관직별 서열에 따른 좌석 배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북쪽의 주벽이 최상위자. 이 그림에 보이는 자리배치는 정치적 위계질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짐.

식탁을 보면, 음식을 소비하게 되는데, 사회관계를 표현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가 식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식탁에 차려진 내용은 서양식 식기가 차려져 있고, 음식은 조선의 음식도 함께 차려져 있음. 술은 식탁에 놓고 의자에 앉아서 먹는 방식이지만 자리배치만큼은 철저히 조선식의 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1883년 당시 관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인들에게 서양식의 식기와 음식, 술을 대접하지만 자리배치 만큼은 한국적인 위계질서에 따라서 함. 조선의 유교문화와 서양의 음식문화가 만나는 자리를 그림으로 그린 것.

1894년에 조선에 파견된 미국 총 영사, 샤일 롱 대령이 조선을 소개하고 조선에서 활동하는 서양 외교관들의 활동에 대해 담은 연재물을 기고한 적이 있음. 그 연재물에 보면 위쪽에 실린 흑백의 삽화가 실려져 있음. 이 삽화는 조선 정부가 서양 외교관을 초대해서 연회를 벌이는 그림을 그린 삽화임.

Page 7

음식문화가 많이 융합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 자료

개항 이후 외국 서양과 교류를 통해 꾸준히 서양 음식을 접하게 되는데, 야외에서 벌이는 연회(원유회)를 개최하면서 서양음식을 대접하는 기회들이 더 많아짐. 다양한 음식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원유회가 됨. 그러나 원유회(가든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 여전히 서양 음식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일본사람들에 불과했고, 결국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사회적으로 서양음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일본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 같은 것으로 서양음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 입맛에 맞게 표준화하는 과정이 있었음. 그래서 일본식의 서양 음식을 많이 만들어냄. 햄박스테이크나 돈까스 같은. 그런 것에 비교해서 한국은 굉장히 제한적인 만남과 접촉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서양 요리의 대중화, 중산층에서 서양 요리를 소비하는 것을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함(단체급식). 정부 쪽에서도 서양 음식, 고기를 많이 먹어야 체력이 좋아지고 신장이 커진다고 정부 쪽에서 많이 홍보함. 그래서 화양절충요리 시도들이 많아짐. 정부 주도의 근대화가 음식 문화에서도, 일상 문화에서도 한국보다 더 이른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된 결과 음식문화도 일본이 서양 음식에 절충된 음식문화를 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될 수 있었음.

Page 8